

NEWS

2025년 4월 15일 화요일

김영록 지사 “전남의대, 2027년 정원 배정 노력”

대선 선거비용 588억까지 가능 선관위, 선거비용 한도액 결정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 비용이 총 588억여원으로 14일 결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대선 선거비용 제한액을 588억5281만9560원으로 공고하고 각 정당과 입후보예정자에게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2월 28일 기준 전국 총인구수에 950원을 곱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고려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비율(13.9%)을 적용한 뒤, 선거사무장 등의 총수당 등을 가산해 산정한 액수다.

또한 지난 20대 대선의 선거비용 제한액(513억900만원)보다 75억3381만9560원 증가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사용한 선거비용은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하면 전액 보전한다. 10% 이상~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보전한다.

다만, 예비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이나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보전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1면 ‘내란 우두머리’서 계속

검찰은 경찰과 계엄군의 국회, 선관위 등 투입 사실을 조목조목 언급하고는 “폭동성이 강하게 발현된 지역은 경기 수원 선거연수원, 여론조사 꽃 등”이라며 “김 지사는 이와 같은 피고인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형법 87조를 적용해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법정에서 들어와 담당판형 표정으로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장이 개정 선언을 한 뒤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인정신문 절차를 시작했다.

재판장은 “인적 사항을 확인하겠다. 생년월일은 1960년 12월 8일, 직업은 전직 대통령, 주소는”이라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은 “서초 4동 아크로비스타 〇〇호”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장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나고 묻자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고인 의사는 마참가지냐’는 재판장 질문에 윤 전 대통령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지하 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출석해 취재진 카메라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내년 개교 어려울 듯…尹 정부 호남권 소외 아쉬워 “정권교체 위해 불출마”…새 정부서 현안 탄력 기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4일 “호남 민심이 단합해서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루는데 합심하는 것이 시대 흐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 불출마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출마를 놓고 시대정인의 민주적 정권교체와 내란중식에 도움이 되는

지를 놓고 많이 고민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준비 과정을 거쳐서 도전할 생각은 있었다”며 “다만 광주와 전남은 중앙정치에서 거리가 있다보니 불리한 면이 있다. 정치인들 중에 꿈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도전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광주와 전남 출신 입각은 없었다”며 “중앙부처 국·과장도 호남 출신이 많이 없어서 일하는데 어려움이 많았고 SOC 예산도 줄었다”고 윤석열 정부 시절 아쉬웠던 점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새 정부에서는 호남 인재들이 대거 발탁돼 지역을 잘 아는 인재들이 현안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남의 현안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정치권과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지사 3선 도전과 새정부에서 중책을

받을 경우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지 묻는 질문에는 “지금 단계에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며 “일단 전남의 현안을 잘 추진하고 새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게 우선이다. 앞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하겠다”고 답했다.

전남의 핵심현안인 전남의대 신설과 관련해 사실상 내년 개교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정부의 의대 정원 3058명 동결(회기) 방침에 서운함을 금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에서 2026학년도 신설과 첫 정원 배정은 어려울 거 같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대선 “2027학년도는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를 구성, 지역별로 필요 의료인력이 어느 정도인지 따져서 인력 수급을 결정하고 관련법도 통과됐기 때문에, 당연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대가 없는 전남에는 ‘정원 동결과 별개로 의대를 신설해야 된다’는 논리적 결론으로 귀결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새 정부에서도 추계위를 통해 2027학년도에 신설과 신입생 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세월호 참사 11주기 추모 행사를 이틀 앞둔 14일 오후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을 찾아 추모 헌화 및 묵념의 시간을 갖고 무고한 희생자 사진제공=전남도

“공정하고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 다짐

김영록 지사, 세월호 11주기 진도항서 추모행사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세월호 참사 11주기를 앞두고 14일 진도항에서 추모행사를 열어 헌화·추모하고, 안전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건설을 다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추념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로 하늘의 별이 된 304분의 영령께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형언할 수 없는 상실감 속에서 살아가는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도는 세월호 참사의 뼈아픈 교훈을 깊이 새기고 결코 잊지 않겠다”며 “진도항에 문을 연 국민해양안전관 운영을 통해 해양 안전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목포 고하도에 건립 예정인 (가칭) ‘국립세월호 생명기억관건립

사업(사업비2117억원)이 세월호의 기억과 교훈을 되새기는 의미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토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영령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기리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한마음으로 노력하겠다”면서 안전한 대한민국 건설을 다짐했다.

전남도는 청사에 추모 기간 대형 현수막을 게첨했다. 유관기관과 함께 여객선, 항공기 등 대중 여객시설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재난예방 및 대응체계를 강화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설 계획이다.

박정열 기자 holbul@gwangnam.co.kr

무안공항 폐쇄 연장에 광주공항 국제선 유치 추진

시, 관광업계 등 타격…정부에 신청서 제출키로

광주시가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신청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본격적인 운항 준비에 들어간다.

강기정 시장은 14일 시청에서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주 안에 정부에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개항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국토부가 3월 중에 무안공항 개항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고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여부를 검토하려고 했었는데, 지난 11일 국토부가 무안공항 폐쇄를 3개월 더 연장키로 했다”면서 “무안공항 재개항의 불투명성이 심화돼 다시 추진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남권 관문 공항을 위해 민간 통합 공항으로 가는 문제도 전남과 노력하겠다”며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 문제도 이뤄지는 안 될 문제라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 신청해서 국토부 정부에서 판단하도록 하는 것도 과제”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지역 관광업계와 경제계 등을 중심으로 광주공항 국제선 운항 요구가 높고, 안전 문제 등으로 무안공항 재개항 시점이 불투명한 상황인 점 등을 들어 국제선 임시 취항을 추진하고 있다.

광주시가 이번 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국토부는 국제공항 필수요소인 세관·출

입국·검역(CIQ) 시설이 광주공항에 설치 가능하지 여부 등을 검토하고 국방부 등과도 논의한다. 시는 검토 기간이 2달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광주시는 항공사의 국제선 취항 계획 등이 최소 3개월 이전부터 확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국제선 항공 수요가 집중되는 오는 10월 이후 동계 시즌부터는 운항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무안공항 재개항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다”며 “광주공항 국제선 임시 취항과 함께 무안국제공항이 서남권 관문공항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1면 ‘도농상생…’서 계속

타지역 농협과 사업을 추진한 사례도 있다.

완도 청산농협과 남서농협은 지난 2023년 12월 남서농협 지점에 완도 농특산물 판매장을 설치하는 ‘유통채널 제공형’ 사업을 시작했다.

도시농협이 자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 일부에 농촌농협이 생산한 농산물을 팔기 위한 장소를 제공하고, 농산물 판매액을 농촌농협과 도시농협의 경제사업 실적으로 동시에 인정받는 방식이다. 남서농협은 나주지역 14개 농협과 38억원을 들여 설립한 나주시조합공동법인 운영에 참여하고 있다.

이 밖에 지난해 12월에는 서울 영동농협과 나주 금천농협이 각 15억원씩 총 30억원을 투자해 하나로마트 신축 투자사업(단순지분 투자형)을 진행했으며, 서울

원농협과 영양농협은 39억원을 들여 주유소 신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농상생 공동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데에는 농협중앙회의 역할도 한몫하고 있다. 농협중앙회는 공동사업 투자금의 80% 이내에서 ‘지원자금’을 최대 200억원, 최장 3년간 무이자로 대출해주고 있다. 또 스마트팜 등 우대사업에 대해선 운영자금 100억원을 3년간 이자 없이 지원한다. 공동사업 손실 발생 시 최대 50억원을 지원한다.

아울러 도시농협의 공동사업 참여를 ‘도시농협 역할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사업 투자금액만큼 도농상생 기금 출연액을 경감해준다.

농협 전남본부 관계자는 “지역본부가 도시농협을 발굴하고 증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로 계통 간 상생을 실현하겠다”며 “특히 수도권과 특·광역시 도시농협을 대상으로 도농상생 공동사업 우수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년

집중안전점검

기간 2025. 4. 14. ~ 6. 13.




전라남도

행정안전부